
이슈브리프

2016. 11. 17

I. 美 대선 결과 분석 및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 / 1

II. 트럼프 당선과 한국의 경제·통상 여건 전망 / 8

III. 트럼프 쇼크를 보는 일본의 시각과 시사점 / 14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美 대선 결과 분석 및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

2016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기반의 클린턴 투표율은 2012년 오바마 투표율보다 낮았던 반면, 공화당 지지기반의 트럼프 투표율은 2012년 롬니 투표율과 거의 같았고 특히 백인 고졸자의 공화당 후보 투표율이 크게 증가함. 트럼프의 이미지, 자질, 현안 해결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이유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요약됨. 현재 한국에서도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기존체제와 다른 혁명적 변화’가 내년 대선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黨은 ‘변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1. 유권자 투표선택 분석¹⁾

○ 인종별

- 백인 : 58%는 트럼프 선택, 37%는 클린턴 선택
- 유색인종(black/Hispanic/Asian/other) : 21%는 트럼프 선택, 74%는 클린턴 선택
- 2016년 현재 전체 유권자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이기 때문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백인의 표심을 잡는 것이 필수적임

○ 성별

- 남성 : 53%는 트럼프 선택, 41%는 클린턴 선택
- 여성 : 42%는 트럼프 선택, 54%는 클린턴 선택

1) Data: 2016 national exit polls

○ 교육수준별

- 고졸 이하 : 52%는 트럼프 선택, 44%는 클린턴 선택
- 대졸 이상 : 43%는 트럼프 선택, 52%는 클린턴 선택
 - 1980년 이후 대졸자와 고졸자 간 투표선택의 차이가 가장 큰 선거였음
 - 예컨대, 2012년 선거에서는 두 집단 간 투표선택에 거의 차이 없었음(고졸자: 51%는 오바마 선택, 47%는 롬니 선택, 대졸자: 50%는 오바마 선택, 48%는 롬니 선택)

○ 연령별

- 44세 미만 : 40%는 트럼프 선택, 52%는 클린턴 선택
- 45세 이상 : 53%는 트럼프 선택, 44%는 클린턴 선택

2. 2012년 대선 결과²⁾와 비교時 특이점

: 정당 지지기반 득표에서 민주당의 열세

① 공화당 지지기반의 투표선택

- 레이건(1984년), 롬니(2012년)와 더불어 트럼프는 민주당 후보보다 백인 유권자 표를 20%p 가량 더 획득한 공화당 후보임
- 남성 유권자의 트럼프 투표율(53%)과 2012년 롬니 투표율(52%)은 거의 차이 없음

2) Data: 2012 national exit polls

○ 백인 유권자 집단의 경우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트럼프를 더 많이 선택

- 백인 고졸자 : 67%는 트럼프 선택, 28%는 클린턴 선택

- 백인 대졸자 : 49%는 트럼프 선택, 45%는 클린턴 선택

- 트럼프가 백인 고졸자로부터 받은 득표율(67%)은 1980년 이후 최고 수치임
- 이처럼 백인 고졸자의 공화당 투표가 증가하면서 백인 대졸자 집단과 고졸자 집단 간 투표선택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음

② 민주당 지지기반의 투표선택

○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유권자의 클린턴 투표율은 2012년 오바마 투표율보다 낮음

- 2012년 흑인 유권자의 93%가 오바마에 투표했지만 2016년에는 88%가 클린턴에 투표

- 2012년 히스패닉 유권자의 71%가 오바마에 투표했지만 2016년에는 65%만이 클린턴에 투표

- 멕시코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비하하고 멕시코 국경에 불법이민을 막을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에 분노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 증가가 예상됐으나 실제로 이들의 투표참여율은 증가하지 않았음
- 오히려 히스패닉 유권자의 트럼프 투표율(29%)은 2012년 롬니 투표율(27%)보다 2%p 더 높았음

- 트럼프의 여성 비하 발언 및 성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투표 참여율은 증가하지 않았음
 - 게다가 여성 유권자의 트럼프 투표율(42%)과 2012년 롬니 투표율(44%)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클린턴이 민주당 지지기반인 여성 유권자 동원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의미
- 저연령(18-29세) 유권자의 클린턴 투표율(55%)은 2012년의 오바마 투표율(60%)보다 낮음
 - 저연령층의 클린턴 지지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세대별 투표 선택 차이는 2012년보다 줄었음

3 요약

- 트럼프는 2012년의 롬니만큼 공화당 지지기반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기반의 일부를 견인하는데도 성공함
- 민주당 지지기반의 클린턴 투표율은 2012년의 오바마 투표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음

3. 트럼프 투표 이유³⁾

- 트럼프의 이미지나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 평가율은 낮음
 - ‘트럼프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 38%, ‘트럼프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 33%,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38%, ‘트럼프가 당선되면 좋을 것이다’ 40%

- 유권자가 트럼프의 현안 해결능력을 더 높게 평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예컨대,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유권자들은 ‘경제(52%)’를 가장 많이 꼽음
 - ‘누가 경제문제를 더 잘 다룰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유권자의 49%는 트럼프, 46%는 클린턴을 응답해 거의 차이 없었음
 - 이는 현안 해결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두 후보가 크게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에게 투표한 주이유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 변화에 대한 갈망인 것으로 나타남
 - 연방정부에 실망했거나 화가 난다고 응답한 유권자의 58%, 국가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63%,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69%, 대통령 후보의 자질 가운데

3) Data: 2016 national exit polls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유권자의 83%가 트럼프에 투표

- 다시 말해, 기존 체제와는 다른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기존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more of the same)’ 클린턴에게 투표할 수 없었던 민심이 트럼프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음
- 2016년 미국 유권자가 원한 것은 ‘변화(change)’
- 트럼프는 변화를 상징, 클린턴은 기존 체제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됨

4. 트럼프 당선이 새누리당에 주는 시사점

- 2017년 대선 대비, 黨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민심에 응답하는 담론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변화’의 이미지를 적극 구축
- 현재 기성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과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기존 체제와는 다른 혁명적 변화’가 내년 대선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임
- 변화를 상징하는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기 위해 지지정당을 이탈하는 유권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변화를 상징하는 트럼프의 이미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요인이었음
- 따라서 黨은 민심이 원하는 바를 포착해 이를 반영하는 담론과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변화의 상징이 되어야 함

○ 앞으로 2년 뒤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美 의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對美관계 전략 수립 필요

-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2018년에 실시
되는 중간선거는 트럼프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고, 그 결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 있음

- 黨은 이러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트럼프 정부 하에서의 對美관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작성: 최호노 연구위원 ☎ 02-2070-3312]

II. 트럼프 당선과 한국의 경제·통상 여건 전망¹⁾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의 경제·통상관련 주요 공약은 국익을 우선시하여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것임. 이에 따라 세계경제질서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에게서는 기회요인과 함께 더 많은 위협요인이 예상됨. 이에 우리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단기 안정화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1.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통상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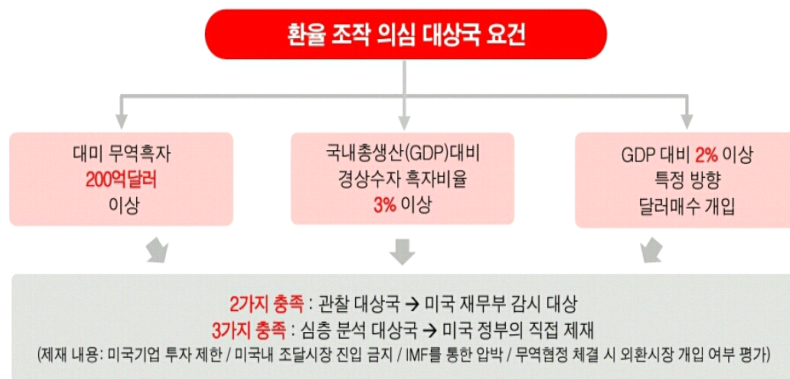
- 美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외의 큰 격차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제치고 제45대 대통령에 당선
 -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이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
 - 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친(親)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무역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됨
- 트럼프의 주요 경제·통상관련 公約과 그 限界
 - (세계질서) 미국의 경제성장 및 무역수지 개선을 우선적(‘America First’)으로 고려

1) KOTRA Global Market Report(2016.11),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Trump 당선자)” 및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16.11), “트럼프가 美 대통령이 된다면?(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발췌, 요약

- (통상정책)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통상 정책 추진

- 환율관련 BHC 수정법안²⁾, 통상관련 무역특혜연장법(TPEA)³⁾으로 보호무역 정책 강화

[그림] BHC수정법안(Bennet-Hatch-Carper Amendment)



출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16.11) 재인용

- 중국·멕시코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강력 대응

※ 무역대국 간의 통상마찰 심화와 글로벌 환율전쟁 본격화로 중장기적으로 쏠세 세계 교역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세계적 저성장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

- (재정정책)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필요성으로 인해 취입 초반 재정정책 확대 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

2) '2015 무역강화 및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으로 2015년 12월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2016년 2월에는 상원 통과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 특히 이 법안의 환율관련 부분에 해당하는 BHC 수정법안이 주목 받고 있음

3) 무역특혜연장법(TPEA: 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은 2015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였는데, 여기에는 반덤핑관세 조사 재량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특히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피소 업체에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 최고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 그러나 여전히 높은 국가부채비율로 인해 재정의 지속적 확대는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비교적 단기에 그칠 전망

- (통화정책) 저금리 및 美달러화 약세를 통한 미국경기 회복 유도

- 집권 초기에는 현 Fed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친화적인 새로운 연준의장 선임을 통해 저금리 공약을 실현할 전망

※ 그러나 과도한 弱달러 정책에 따른 외국인 자금이탈 등 美국채시장 불안요인도 잠재

2. 미국의 경제·통상 정책 전망 및 우리나라의 영향

○ 트럼프 당선 직후 국내증시 급락

-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재정정책 확대와 달러화 약세 정책으로 국내 증시 회복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정책 효과 일단락 및 통상마찰 심화로 트럼프 정책의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결국 全세계 교역 부진과 한국 수출경기 회복 지연으로 결국 KOSPI 박스권 돌파를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

○ 한·미 경제전망

- (미국) 감세 및 인프라투자 확대, 弱달러 정책에 힘입어 집권 초기에는 경제성장세 3%대 회복, 중기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및 불확실성 확대의 역풍에 직면하여 경기침체

- 임기 중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및 중소기업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 미국내 화석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 도모
- (한국) 경상수지/GDP 비중이 7%를 상회한 데 따른 대규모 원화절상 압력에 직면하며 수출경기 침체, 그리고 대북정책 강경기조時 국가 신인도 하락 위험 상존

○ 한·미 금리전망

- (미국) 단기 상승 후 중장기 하락 전망
- 집권 초반, 감세 등에 따른 성장 회복과 온건한 금리인상 기조 유지로 완만한 상승하나, 중장기적으로는 보호무역과 교역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와 통화완화정책으로 하락
- (한국) 성장 둔화와 저물가 등 우리 경제의 fundamental의 불확실성으로 지속적 완화정책으로 중장기 금리하락 견인

○ 한·미 환율전망

- (달러지수) 트럼프의 弱달러와 금융완화정책 선호를 감안 하면 90선을 하회하는 弱달러 전개
- (원/달러 환율)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단기 절상 압력에 직면하나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時 중장기적 절하 예상

※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
하면 위안화 절상 압력 확대와 G2경제 간의 환율전쟁 가능성

<표> 오바마/트럼프 정부 경제정책 비교

정 책	오바마	트럼프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5만 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 최대 1만 달러 까지 대학자금 세금 공제 ▶ 상위 0.1% 소득자 평균 소득세 6% 인상(28%) ▶ 중소기업의 세제 간소화 및 투자 50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 간소화 및 소득세 감세 ▶ 법인세 15%로 인하 및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조세유예 폐지 ▶ 오바마케어 세금 및 상속세 폐지 ▶ 소득공제 기준 인상 및 개인/세대 주 소득세 공제 폐지
재정적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 초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 시행 ▶ 부유층 증세와 법인세제 개혁을 통한 세입확대를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과 국가안전을 제외한 모든 예산을 매년 1%씩 감축하여 향후 10년 동안 1조 달러 절감 ▶ 화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세수증대 효과 추구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권 초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 ▶ 국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공공인프라 투자, 불법이민자 추방 및 미국 취업비자(H1-B) 적정임금 상향 조정을 통해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도모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물리학, 생명과학 등 융복합 첨단 제조업 육성 ▶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확보 ▶ R&D 투자 및 세금공제 확대, 연구개발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를 건설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업적을 앞세워 제조업 육성 추구 ▶ 건설업, 철강제조업, 도로건설, 항만 및 수로 등 인프라 구축 추진
에너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산업에 대한 보조금 중단 ▶ 국유지 내 천연가스/석유개발 규제 강화 /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추진 ▶ 자동차 연비효율기준 강화로 전기 자동차 개발노력 장려 ▶ 친환경에너지산업 세제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석에너지 개발과 석탄화력발전 억제규제 철폐 ▶ 연방정부의 환경규제권한 축소 및 파리기후변화 파기와 UN지구온난화 프로그램 자금 납부 중단 ▶ Keystone 파이프라인을 지지하는 반면, 고급 에너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주장
금융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 법(도드-프랭크법) 단행 ▶ 월스트리트의 관행적 위험 투자 규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통한 금융기관의 영업자유 확보 ▶ 연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례 감사 도입 추진 ▶ 소비자금융보호청 폐지 주장
보건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목표로 오바마케어 발효 및 건강보호법 개혁 단계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케어 폐지와 건강저축계좌(HSA) 도입 및 건강보험료 전액 세액공제 ▶ 해외 제약업체 진입장벽 제거하여 소비자의약품 선택권 보장

출처 : KOTRA Global Market Report(2016.11) 재인용

3.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시사점) 이번 미국 대선에서의 핵심이슈는 ‘경제’
 - 미국경제의 저성장 지속에 따른 경제 이슈 부각
 - 내년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論이 주효하며, 성장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 여부가 관건
- (단기 대응방안)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한 안정화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 경제·통상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재확인 등
- (중장기 대응방안) 보다 긴 호흡(time-span)으로 美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른 기회요인 극대화 방안 마련
 - 트럼프 재임 중 미국경제 성장을 주도할 공공인프라, 석유·가스, 항공 방위 및 의료제약 산업에 대한 對美진출 확대 등
 - 반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추진
 -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미·중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방안 필요
 - NAFTA, TPP,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했거나 추진해온 자유무역협정의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비
 -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에 대비

[작성: 하현철 연구위원 ☎ 02-2070-3315]

Ⅲ. 트럼프 쇼크를 보는 일본의 시각과 시사점

일본언론은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지지로 만들어내며 당선된 트럼프에 대해 그 불만이 미국의 對동아시아 및 對日정책에 반영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특히 ‘미국 제일주의’로 인한 불합리한 요구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우리 또한 한미 FTA 재개정, 방위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1. 美 대선, 무엇이 승패를 갈랐나¹⁾

○ 트럼프, 기성 정치에 강한 불만을 가진 유권자 흡수

- 트럼프는 정치경험도 없는 이른바 ‘아웃사이더’임을 어필하면서, 기존 정치에 강한 불만을 품은 유권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결집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슬로건으로 외교 및 內政에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표명,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보임
- 특히,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 오하이오州 등 중서부 지역의 백인 노동자층의 지지를 확대하는 한편,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문제를 부각, 그녀의 불신감을 확대시키는 데 성공

1) NHK On Line 美 대선 분석: “アメリカ大統領選挙2016” 참조.
<http://www3.nhk.or.jp/news/special/2016-presidential-election/>

※ 트럼프가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등 쇠락한 산업지대인 이른바 ‘러스트 벨트’에서 큰 지지를 얻은 것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 러스트 벨트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음. 트럼프 지지가 우세한 고령의 백인 남성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제조업의 황금기를 경험했으나, 경제 글로벌화와 함께 철강 및 자동차 등의 산업이 쇠퇴를 목격. 생계 및 생활에 불안감을 가진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불법이민자 추방’이나 ‘자유무역 반대’의 주장에 공감하였음 [아사히신문(朝日新聞), トランプ氏、民主党の地盤を次々破壊 産業廢れた各州(2016.11.09.)]

○ 클린턴, ‘기성 정치인’, ‘부유층의 대표’로 인식

- 클린턴은 퍼스트레이디, 상원의원, 국무장관 등을 역임, 트럼프에 의해 ‘구태 정치인’으로 낙인찍혀 現정치에 불만을 품은 유권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는데 실패
- 특히 월가로부터 다액의 정치헌금을 받는 등, 오히려 ‘부유층의 대표’로 인식,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음
- 투표일을 앞둔 10.28일 FBI가 클린턴의 새로운 메일을 발견, 종결된 수사의 재개로 인한 이미지 악화가 트럼프의 추격을 허용

2. 트럼프의 주요 정책 : 自國 제일주의로 전환

○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의 주요 정책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제일주의 ● 미국이 세계 경찰관이 될 필요 없음 ● 일본 등에 미군 주둔비용 증액 요구 ● 일본의 핵보유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음 ● 러시아와 협력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 대폭 감세(減稅) ● 중국의 환율조작 是正 ● 중국/멕시코에는 고관세 부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업이민자 송환 및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건설비는 멕시코에 부담지울 것) ● 이슬람 교도의 입국 금지 ● 총기규제 반대 ● 낙태 반대 ● 오바마 케어 철폐

출처 : 지지통신(時事ドットコム; 2016.11.09.) 및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16.11.09.)
http://www.jiji.com/jc/graphics?p=ve_int_america-topelection20161109j-11-w310
<http://www.asahi.com/topics/word/ドナルド・トランプ.html>

○ 국내지향의 내향화(内向化) 강화 전망²⁾

-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쇼크 후 발족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자유 무역체제 및 국제질서의 재구축, 나아가 미일동맹 강화 등의 오바마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트럼프의 미국은 내향화 움직임이 강해질 것임
- 트럼프는 오바마 외교에 대해 “저자세의 소극적이고, 혼란스럽고, 완전한 실패”라고 비판하며 ‘미국 제일주의’의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음

2) 마이니치신문, “클로즈업 2016”(2016.11.10.); クローズアップ 2016, 大統領にトランプ氏 米国, 内向き強める. <http://mainichi.jp/articles/20161110/ddm/003/030/082000c>

○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內政·외교노선을 전환하려할 것은 확실

- 하지만, TPP 탈퇴 등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제일주의'는 공화당의 전통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권운영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불투명

3.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일본의 우려

○ '미국 제일주의'로 인한 외국 책임 전가 가능성

- 미국이 외국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 제기 우려³⁾
- 트럼프의 미국 이익 최우선의 기조가 통상문제 등에 있어 외국으로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 존재
- 미국 국민의 기존 정권의 정책에 강한 불만이 트럼프의 지지로 연결되었지만, 성장력을 높이거나 격차를 해소하는 등 그 불만을 금방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음
- 여기서 불만의 배출구로서 외국에 불합리한 요구를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

3) 마이니치신문(2016年11月10日); 毎日新聞, “トランプ政権は経済政策次第で大化けの可能性も”, 安井明彦(야스이 아키히코)-みずほ総合研究所 欧米調査部長
<http://mainichi.jp/premier/business/articles/20161109/biz/00m/010/026000c>

○ 미일동맹 약화 가능성

- 미일동맹의 불안정화는 피해야 함⁴⁾
 - 트럼프의 주일미군,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부담의 대폭 증액 발언과 관련, 일본은 동맹국들 중에서도 다액(多額)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 미일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의 일본방어의무뿐 아니라 일본의 기지제공을 규정, 이로써 미군은 전방전개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음
 - 미일동맹이 '공공재'로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또는 외교 측면에서 발언권을 확보와 함께 무역·투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음
- 중국·북한에게 실기(失機)하는 상황 발생 우려⁵⁾
 - 일본 정부내에서도 미일동맹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對日, 對아시아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우려 증대
 - 트럼프 당선 이후 동아시아정책에서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삼지 않고,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기회를 뺏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

○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전세계에 불이익

- 신흥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⁶⁾
 - 트럼프가 선거운동 중 자유무역을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했던 점을 가장 우려

4) 요미우리신문(2016年11月12日); 読売新聞, “トランプ外交 日米同盟の不安定化は避けよ”, ‘社説’
http://www.yomiuri.co.jp/editorial/20161111-OYT1T50147.html?from=yartcl_blist

5) 산케이신문(2016年11月10일); 産経ニュース, “トランプ・ショックでどうなる日本…「中国, 北朝鮮につけこまれる可能性も」元NHKワシントン支局長・手嶋龍一氏”
<http://www.sankei.com/economy/news/161110/ecn1611100011-n1.html>

6) 요미우리신문(2016年11月11日); 読売新聞, “トランプ経済策; 保護主義は全世界の不利益だ”, ‘社説’
http://www.yomiuri.co.jp/editorial/20161110-OYT1T50184.html?from=yartcl_popin

- 고용 상실 및 생활 궁핍의 원인은 값싼 외국제품의 유입에 따른 것이라며, 저소득 백인층의 불만 해소책으로 극단의 보호주의를 제기
- 일본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高關稅를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겠다는 발언도 있었고, NAFTA의 수정도 언급
- 미국이 고용유지를 위해 자국 시장을 잠그고 보호주의를 강화한다면,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에 있는 신흥국에게 타격이 매우 클 것이며, 세계경제의 정체는 결국 미국의 경제성장도 저해할 것

4. 시사점

○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요구 대비 대응책 준비

- 일본정부는 17일 아베·트럼프 회담을 갖는 등 발빠른 대응을 준비
- 특히, 주일미군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 진출 견제를 위해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일본의 부담 수준이 낮지 않다는 점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임
-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낮고, 미국의 재정적자와 트럼프의 공언대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이 실행될 것을 고려하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요구는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14년 맺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는 이미 분담금이 확정돼 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가 재조정 요구를 해 올 경우 어떤 논리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준비 필요

○ 트럼프 정책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노력 필요

-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글로벌 시장의 교역 위축을 초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트럼프의 “일본은 엔저를 유도해 대미 수출을 확대해왔다”는 선거 중 발언에 주목, 일본 수출기업의 타격을 우려하며 리스크 대책 강구
- 트럼프는 NAFTA와 한미 FTA 역시 재협상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만큼, 멕시코 등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생활가전업종 등을 비롯 국내 對美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 필요

[작성: 최원용 연구위원 ☎ 02-369-7949]